

중소기업의 연구개발(R&D) 지원

새누리의 진단

-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(R&D)투자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음.
-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정부의 R&D 지원예산 중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과제 비중을 제고
- 상용화 단계의 R&D는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전하고 정부출연 연구소의 R&D 기능은 기초연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,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&D에 투입하는 쿼터제 도입
-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R&D성과물에 대해서 중소기업에게 우선 이전하도록 법제화
-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집중하고 반복 및 장기지원은 제한

새누리의 실천

- R&D 지원체계 및 연구소 운영개선
-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개선

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

새누리의 진단

-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급기술 인력, 해외마케팅 및 영업 인력 등의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 필요
-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전망, 미흡한 교육인프라, 낮은 인지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중소기업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, 공동교육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(가칭 ‘인력공동관리협의회’) 구축
- 인력공동관리체제와 연계하여 우수 전문대학을 직능별 ‘직업교육중심기관’으로 육성하여 전문대학교육의 실용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재교육을 지원
- 교육훈련 투자로 기술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‘인재육성형 중소기업’으로 지정하고 정책지원과 연계
-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분담금 가중 부과

새누리의 실천

-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

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

새누리의 진단

-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(2011년 20.6%)이 낮고 중소기업 생산액 중 수출비중(2011년 14.5%)도 낮은 편임.
-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육성 필요

새누리의 약속

-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수요가 다르므로 수출준비단계, 수출실행단계 및 현지진출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수출지원체계 구축
- 정부의 연구개발(R&D) 자금지원을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중소기업과 내수에서 수출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
- 중소기업진흥공단, KOTRA 등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189개 수출 진흥사업을 통합·조정하여 윈스탑 서비스 센터 마련
- 중앙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사업예산을 현행 중소기업 지원예산 1.9%에서 5%수준으로 확대

새누리의 실천

- 사업우선순위 조정

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

새누리의 진단

- 복잡한 회생·퇴출절차, 법률서비스 곤란 등으로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가 어려운 상황

새누리의 약속

- 「통합도산법」에 '간이회생제도'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
-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실패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성실납부실적과 연계하여 국세 감면 혜택 부여

새누리의 실천
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통합도산법」 등 관련 법률 개정

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

새누리의 진단

- 창업에서 마케팅, 시장확보 등 모든 과정을 최고경영자(CEO)가 혼자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통 및 판로확보 지원책이 미흡
- 판로개척문제를 개별 사업자의 능력문제로 취급하여 지원예산 부족

새누리의 약속

- 입찰시 기술제품·기술서비스 우선 적용하고, 적정입찰가격제 도입 유도
- 정부조달·공공구매 비율을 확대하고,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평가항목으로 설정
- 「국가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계약의 경우 부문별(업종별), 전문 역량에 따라 분할하여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분할·분리 발주 법제화

새누리의 실천

- 「국가계약에 관한 법률」 개정,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점검 대상 확대